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江原日報	01면	강원도 방문한 한덕수 총리	1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강원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2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특자도 특례 관철 · 4월 입법 동력 얻었다	3
강원도민일보	02면	원희룡 "강원만의 테마 잡아 규제 확 풀어야"	4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발전 염원 여야 따로없다" 함께 풍선 들고 지원위 맞아	5
강원도민일보	03면	한 총리 "자유를 달라"	5
강원도민일보	21면	도체육회 민선 2기 출범… 강원체육 백년대계 문 활짝	6
강원종합뉴	온라인	[강원도]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7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도의원 75% 토지 소유 '평균재산 12억1000만원'	8
강원도민일보	20면	"강원도민 공감대 형성 소통하는 통일운동 박차"	9
江原日報	18면	양양군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열려	9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자연보호중앙연맹 강원연합회 정기총회	10
江原日報	온라인	평창군 도시재생 제1호 공동이용시설 ‘꿈의대화 톡톡’ 오픈...	11
강원도민일보	04면	검찰 "신경호 교육감 기소 가능… 내달 결론"	12
강원도민일보	03면	김 지사 "강원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최고"	12
CBS	온라인	강원도, 산림사업에 52억원 투자	13
東亞日報	16A	강릉 곳곳에 벚꽃 만개… 강원도 봄꽃축제 개막	14
강원도민일보	14면	삼척시, 도에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건설 협조 요청	15
江原日報	20면	태백 청정수소산업 전진기지로 도약	15
강원도민일보	05면	하루 5곳서 동시다발 산불 · 올해 첫 '2단계 대응' 발령도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수열에너지 산업 주도권 선점해야	1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음주운전 급증 더 경계할 때	18
江原日報	25면	[사설] 道, 특별자치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응집력 키워야	19
江原日報	25면	[사설] 퇴임 조합장 특별공로금, 조합원들이 환영할 일인가	20

江原日報

2023년 03월 31일 (금)
종합 01면



강원도 방문한 한덕수 총리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참석을 위해 강원도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장과 함께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포토뉴스]강원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강원특별자치도 제1차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참석을 위해 강원도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등과 함께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참석을 위해 강원도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등과 함께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참석을 위해 강원도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진태 강원도지사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승선기자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참석을 위해 강원도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진태 강원도지사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1일 (금)

종합 01면

강원특자도 특례 관철·4월 입법 동력 얻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

한덕수 총리·정부부처 총출동
“지방정부 불신 사고 벗어나야”
특례 조항 제동 정부 태도 지적
환경부 “제주만큼 권한 이양을”
김 지사, 대통령 1호공약 강조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이 직접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특례 조항 관철 등 4월 입법 동력이 다시 마련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 정부부처별로 군사·산림 등 4대 핵심규제에 반대입장(본지 3월20일자 3면)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엔 정부에선 한 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남성현 산림청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강원도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규제 제한을 받아 지역발전이 저해돼 왔다”며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창의적인 개발계획,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됐다”고 언급, 특례 조항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정부부처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진태 지사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강원도에 출출동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은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137개 조항만 남겼다”며 “이것은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며, 특별법은 빈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반도체 공장원주유지의 전제조건인 ‘물 문제’와 관련, 수질오염 총량관리 개발부하량 추가 반영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적용 검토 방침을 밝히며 “환경 분야에 대해선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희룡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도 “특별법에 겹치기만 있어선 안 된다”, “전향적 자세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총리와 김 지사 등은 이날 오후,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방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전국 유일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보유 한 바이오헬스 산업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곳”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세훈·이설화▶관련기사 2·3면·별첨 kado.net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청을 방문, 김진태 도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서영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1일 (금)

종합 02면

원희룡 “강원만의 테마 잡아 규제 확 풀어야”

도내 주요 철도사업 조속 추진 약속

용문~홍천철도 ‘낮은 경제성’ 언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강원만의 테마’를 잘 잡아야하고 강원도에 대한 규제는 확 풀어야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천군민 숙원사업인 용문~홍천철도에 대해서는 “(양평군이 추가요구한)정차역 문제 때문에 경제성이 더 떨어진다”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내비쳤다.

용산역에서 ITX를 타고 춘천에 도착한 원 장관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역임한 원 장관은 “강원도가 표고버섯 재배 등 (1차산업)으로 먹고사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관광과 지식산업이다”라며 “지식산업은 입지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데 네이버 데이터센터같은 기관들이 더 많이 와야한다. 그럴려면 규제를 확 풀어야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GTX-B노선 춘천 연장 등 강원 주요 철도사업 조속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국토부는 전 속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설계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짧게 5년 정도로 본다면 대략 7년이 지나면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춘천, 원주, 강릉 등이 수도권과의 교통접근성이 많이 개선돼 강원도가 수도권 배후도시가 될 수 있다”며 “‘선(先)테마-후(後)규제완화’ 방향으로 상승작용해야한다. ‘그냥 내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30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김진태 도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영

나라’, ‘국가에서 알아서해달라’라는 등 쳐다보고만 있어선 안된다”고 했다. 다만, 원 장관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선 “(양평군이 추가요구한)정차역 문제 때문에 경제성이 더 떨어진다. 용문선을 다 들른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등) 승인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오전 8시쯤 춘천역에 도착, 춘천역사와 레고랜드 주변 교통망 등을 둘러봤다.

정부부처장·차관 중 가장 먼저 도청을 찾은 원 장관은 김지사, 권혁열 도의장과 함께 도청 본관 로비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맞이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원 장관이 부처 관계자들에게 “강원도 규제 풀어주셔야한다”고 거듭 건의하자 김 지사는 “원장관님, 감사드립니다. 10년 전에 당 사무총장이셨을 때 인연을 나눴던게 생생한데, 오늘은 강원도에서 다시 만나게 돼 너무 좋다”고 했다.

박지은

▶ 인터뷰 전문 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1일 (금)

종합 02면

“강원발전 염원 여야 따로없다” 함께 풍선 들고 지원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 첫 회의

양당 정치인 도청 앞 퍼포먼스

규제 특례 특자도법 반영 요청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조기 통과를 위해 강원도 여야 정치권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강원도 방문을 한 마음으로 환영하며 협치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30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 회의의 주제를 위해 도청에 방문한 한 총리 등을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관들을 반갑게 맞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30일 강원도청 앞에서 한덕수 총리를 맞이했다. 한 총리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주제를 위해 춘천 강원도청을 찾았다. 서영

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강릉)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도의원, 춘천시 의원 등은 빨간색과 파란색 풍선을 들고 도청 앞 광장에 섰다. 빨간색은 국민의힘,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야 협치의 의미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준비했다.

허영 의원은 “특별법에 담긴 권한이 양에 대한 정부의 저항감이 심한 상황”이라며 “향의 보다는 여야가 따뜻한 환영의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 수용에 대한 절실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진호 춘천시의회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

야가 필요없다”며 “정당을 떠나 강원발전을 위해 하나가 된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나란히 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권교체, 도정교체 이후 1년만에 강원도에 역동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 협조를 위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이 말뿐이 아닌 강원도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1일 (금)

종합 03면

한 총리 “자유를 달라”

강원 규제개선 의지 ‘상징적 표현’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지원위 첫 회의에서 자유가 거론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지원위 1차 회의의 주제를 맡으며 “권한이 아니라 자유, 한시적 자유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자유’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언급됐다. 김진태 도지사가 ‘거미줄 규제’로 지역발전이 가로막힌 강원도의 실태를 전하자 한 총리가 같이 화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정부 부처장·차관들에게 “김진태 지사께서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다. 자유다”라고 했다.

한 총리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자유’로 연결한 것은 분단 이후, 오랜 기간 강원도가 떠난고 있는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꼬집어낸 것이다. 이와 관련, 그는 “강원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과 접경지역의 등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개발이 제약됐고, 지역산업의 중추였던 광업의 쇠퇴는 강원도 주력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최근 강원도는 지역총생산 전국 하위권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하며 강원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김지사는 “규제완화 대신 자유를 달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며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규제완화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시겠다는 것인지 실감했다”고 밝혔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1일 (금)

스포츠 21면

도체육회 민선 2기 출범... 강원체육 백년대계 문 활짝

강원체육인 500여명 참여 '청료'
양희구 제40대 도체육회장 취임
김 지사 "연 180억원 예산 지원"

민선 2기를 출범한 강원체육인들이 새롭게 개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약속하며 소통하는 체육현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원도체육회(회장 양희구)는 30일 강원도체육고등학교체육관에서 제40대 강원도체육회장 취임과 민선 2기 체육회 출범식을 열고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병규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 회장,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허인구 G1방송사장, 김종규 춘천MBC사장 등 500여명의 강원체육인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양희구 제40대 강원도체육회장 취임, 지난 민선 1기 주요 성과 보고 및 민선 2기 체육비전 제시, 강원



제40대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취임식 및 민선 2기 체육회 출범식이 30일 강원체육고 체육관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병규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 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시·군 체육회장과 체육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태 도지사와 참석자들이 버튼을 누르며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체육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소통·연대를 강조하는 기념사, 출범 세리머니, 체육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됐다.

행사를 통해 함께하는 강원체육, 건

강한 강원도'를 비전으로 민선 2기 강원도체육회·18개 시군체육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며 '새로운 강원체육 백년대계'의 문을 활짝 열었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출범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체육인과 수시로 소통하는 체육회장이 되겠다"며 "새롭게 개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협력과 연대로, 강원도 발전과 성공을 위해 함께 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축사로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길은 첫째는 예산"이라며 "권혁열 의장님과 도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준다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증액된 연간 180억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이 안되면 몸으로도 뉘겠다"고 말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축사를 통해 "양희구 회장이 그동안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체육회를 이끌어왔는데, 연속적으로 이어받아 강원도체육회를 더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성공해서 강원도체육회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규 부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강원도교육청은 우리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을 튼튼한 기초 체력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2학기부터 도의회의장님의 협력을 받아 초·중·고생부터 최소한 한 종목을 배워 성인이 됐을 때 평생 즐길 수 있도록 학교체육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예섭

강원종합뉴스

2023년 03월 30일 (목)
강원

[강원도]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

강병만 기자



▲ 식목일 행사장 전경

강원도는 2023. 3.31.(금)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하여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동부 지방산림청, 강원임업인총연합회,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 등 130여명이 참여하여 고성군토성면에 위치한『강원세계산림엑스포』주 행사장에서 제 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산림엑스포는 금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한 달간 설악~금강권을 연결하는 4개 도시인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 산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강원 산림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금번식목일의 주요 식재장소는『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랜드마크인솔방울 전망대 주변으로 소나무와 철쭉 등 2023본의 나무를 식재하여 산림엑스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힐링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녹색 복지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올해는 국토 녹화가 본격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해이며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설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식목일을 맞아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단체와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강병만 기자

www.kwtotlanes.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1일 (금)
종합 04면

강원도의회 75% 토지 소유 '평균재산 12억1000만원'

49명 재산신고액 공개 51% 다주택자
평균 2억1000만원 상당 주식 보유

강원도의회 75%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의원 2명 중 1명 꼴로 다주택자인 가운데 26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도 있었다.

30일 본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기준 강원도의회 49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도의원 75%에 해당하는 37명은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액 평균은 6억8000만원이다.

재산 1·2·3순위는 '땅부자'였다. 총 재산 51억700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의회 최고 재력가로 나타난 김기홍(원주) 의원은 본인 소유 원주무실동대지, 부친 소유 원주 일산동대지 등 52억9000만원의 토지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무실동대지 등에 대해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총 재산 41억5000만원을 신고한 홍성기(홍천) 의원은 홍천 두촌면에 임야, 대지 등 총 2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가액은 47억3000만원이다. 이곳은 과석 영농조합 법인 부지다. 홍 의원이 농림수산위 소속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쟁점이다.

총 재산 40억원을 신고한 원재용(원주) 의원도 31억9000만원의 원주무실

강원도의회 2023년도 재산신고액 (22.12.31. 기준, 단위: 천원)

이름	재산신고액	증감액	이름	재산신고액	증감액	이름	재산신고액	증감액
권혁열	1,400,111	75,512	박윤미	350,434	-265,529	이한영	108,823	5,112
강정호	152,621	-34,403	박찬홍	868,499	48,552	임미선	2,198,193	77,844
김기철	379,658	6,476	박호균	1,720,056	14,141	전찬성	2,518,650	118,449
김기하	2,092,339	84,702	심영곤	881,898	88,277	정재웅	310,631	22,499
김기홍	5,170,876	97	심오섭	1,462,484	57,135	조성운	726,466	-204,230
김길수	755,526	9,125	양숙희	684,831	-129,681	지광천	181,369	170,323
김시성	819,264	55,052	엄기호	63,257	129,165	진종호	190,730	71,796
김용래	407,195	8,037	엄윤순	3,325,782	145,133	최규만	389,624	193,676
김용복	352,784	393,262	원미희	1,961,079	68,981	최승순	2,133,342	169,282
김정수	2,283,137	-90,495	원재용	4,002,334	24,421	최재민	-34,618	-5,330
김희철	1,144,178	158,162	유순옥	31,816	-4,199	최재석	3,322,910	-85,219
류인철	380,872	97,871	윤길로	223,281	60,787	최종수	1,381,594	23,004
문관현	3,846,377	-355,280	이기찬	3,749	-36,567	하석균	1,539,414	-84,974
박관희	180,200	14,391	이무철	980,788	11,358	한창수	285,974	94,608
박기영	1,395,822	97,683	이승진	1,287,955	-14,755	홍성기	4,157,517	-111,928
박길선	379,853	12,071	이영욱	1,003,886	57,461			
박대현	114,428	-1,047,920	이지영	155,017	-148,139			

동산 11만㎡를 갖고 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배우자 소유 춘천 서면 도로, 대지 등 1억5000만원이 있다.

이밖에 김정수(철원) 의원이 14억원, 김기하(동해) 의원이 12억원, 엄윤순(인제) 의원이 10억원, 최승순(강릉) 의원이 10억원 등 10억원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도의원 51%(25명)는 다주택자다. 최재석(동해) 의원은 배우자 소유 9억원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1억원 올랐다. 김기하 의원은 서울 강서구 아파트 6억원, 충북 충주상가 4억원 등을 갖고 있다.

도의원들은 평균 2억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타이어커넥션 14억 등 26억7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수호시스템 7억5000만원 등 8억3000만원 상당 주식이 있다. 이들을 포함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직무관련성을 심의 중이다. 도의원 평균 재산은 1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대비 90만원 늘었다. 도의원 16명은 부모, 자녀 등 재산액 고지를 거부했다.

이설화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1일 (금)
인물 20면

“강원도민 공감대 형성 소통하는 통일운동 박차”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장 이·취임식
17대 신임 협회장에 이귀인 취임
최승준 정선군수 등 400명 참석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가 30일 국민고향 정선에서 열린 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서민족통일기반조성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는 30일 정선군여성회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김문기·제17대 이귀인 회장이 이·취임식을 가졌다.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는 이날 정선군여성회관에서 제16대 김문기·제17대 이귀인(사진) 회장이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정일섭 강원도 행정국장,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군

의장, 김근희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부의장, 전영록 전국이통장연합회 중앙회장,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도지사회장, 원행 월정사 부주지 스님 등 4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이임하는 김문기 회장에겐 민통중앙회장의 공

로패, 강원도지사의 감사패, 도협의회 기념품 등이 수여됐다. 이귀인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분단도인 강원도는 통일시대에 허브가 되는 만큼 소통하는 튼튼한 통일운동을 추진해

도민통일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운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열정을 불태우겠다”고 말했다.

정일섭 강원도 행정국장은 축하사에서 “협의회가 통일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통일운동이 꼭 필요하다”며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에 협의회 관심을 당부했다.

신임 이귀인(80) 협의회장은 정선출신으로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수료했다. 정선문화원 이사, 정선로타리클럽 고문,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강원 부동산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유주현

江原日報

2023년 03월 31일 (금)
지역 18면

양양군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열려

【양양】‘2023년 양양군 이장역량강화 워크숍’이 30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장, 진종호 도의원, 양운석 전국이통장중앙연합회 양양군지회장을 비롯한 읍·면 이장 1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리더로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급변하는 시

대에 이장에게 필요한 역량 함양 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술선수범의 자세로 행정과 지역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워크숍이 각 마을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 활기찬 마을을 건설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30일 (목)
사회

[포토뉴스]자연보호중앙연맹 강원연합회 정기 총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 강원도협의회는 30일 홍천군협의회 사무실에서 이상명 중앙연맹 총재와 심영호 도협의회장, 원제용 도의원,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30일 (목)
사회

평창군 도시재생 제1호 공동이용시설 '꿈의대화 특특' 오픈식



평창군 도시재생 제1호 공동이용시설 '꿈의대화 특특' 오픈식이 30일 평창군대화면 (구)농협폐창고에서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심현정 군의장, 최종수 도의원, 남진삼 김광성 이창열 군의원 등 내빈과 지역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창 평창군 도시재생 제1호 공동이용시설 '꿈의대화 특특' 오픈식이 30일 평창군대화면 (구)농협폐창고에서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심현정 군의장, 최종수 도의원, 남진삼 김광성 이창열 군의원 등 내빈과 지역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창군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추진해 완성한 '꿈의대화 특특'은 (구)농협폐창고를 리모델링해 노후건물을 지역아동·청소년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재탄생됐다.

올해 3월부터 대화면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에서 꿈의대화 특특을 직접 관리·운영을 하며 지역주민들의 역량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됐다.

주민협의회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디저트 개발 및 밀키트 제작, 케이터링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홍보는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지역산물 브랜딩화에 힘쓸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지금 이 출발이 대화면 도시재생의 마중물이 돼 끊임없는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검찰 “신경호 교육감 기소 가능…내달 결론”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공범 의혹 수사

검찰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기소가능성을 내비쳤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교육청 전 대변인 A(50)씨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현재 신경호 교육감을 수사하고 있으며, 곧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발언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변론 종결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재판부에 기일 연장을 요청하면서 “신 교육감과 관련,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

으며, 4월 중으로는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정확히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재판부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해 온 검찰은 그간 신 교육감을 공범으로 보고, 별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1)에게 선거운동에 함께한 보상으로도 교육청 채용을 제안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

2023년 03월 31일 (금)

종합 04면

했다. 검찰의 심문에 B씨는 “A씨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도교육청 생활체육특별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신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선인 신분이었던 신 교육감이 직접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와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직을 내려놓은 상태고, 이를 알고 있는 A씨가 B씨에게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4월 6일 오후 2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배상철

강원도민일보

김 지사 “강원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최고”

한 총리, 도 정밀의료산업 특구 방문

특자도법 통과 당위성 피력

정부 차원 관심·지원 요청

30일 강원도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의 주재 이후에 더존ICT그룹강촌캠퍼스를 찾아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등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오찬을 마친 뒤 강원도 정밀의료산

업 규제자유특구에 위치한 더존ICT그룹강촌캠퍼스를 찾았다.

이날 일정엔 김진태 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 김응권 한라대 총장 등 지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함께 했다. 도는 이날 한 총리에게 춘천 정밀의료산업과 강원도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의지를 실현시킬 최적지가 바로 강원도일 것”이라며 “강원도는 전국 유일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보유한 바이오헬스 산업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2023년 03월 31일 (금)

종합 03면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등 정부의 여러 규제 개선 노력이 있었으나, 부분적인 개혁에 그치고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규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적인 해제가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강원특별법을 활용, 강원도에서 규제개혁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면서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규제 샌드박스’로써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계기로 산림, 환경 등 중첩 규제로 인한 저개발상태를 벗어나 강원도 특성에 맞는 특별한 발전계획을 수립,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세훈·김덕형

CBS

2023년 03월 31일 (금)
강원

강원도, 산림사업에 52억원 투자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도립화목원 메타세콰이어 숲 전경. 강원도 제1공공기관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채병문 원장)은 올해 52억원을 들여 조림, 숲가꾸기, 임도 신설 등 산림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도유림 탄소흡수원 확대 및 산림자원 선순환을 위한 조림 38ha와 숲가꾸기 310ha를 추진하고 산림경영과 산림보호에 필요한 산림기반시설인 임도 7km 신설 등을 진행한다.

채병문 원장은 "전체면적의 82%가 산림인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는 만큼 강원도의 산림자원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 강릉시 남산에 벚꽃이 활짝 피어 있다. 강릉은 남산과 도심 곳곳에 벚꽃이 만개했다. 31일부터는 경포호 일원에서 경포벚꽃축제가 열린다. 강릉시 제공

강릉 곳곳에 벚꽃 만개... 강원도 봄꽃축제 개막

31일 강릉 경포벚꽃축제를 시작으로 강원도 내 봄꽃축제의 막이 오른다. 강릉시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경포호 일원에서 '2023 경포벚꽃 축제'를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4년 만에 찾아온 축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2023 경포, 벚꽃에 물들다'로 바다와 호수, 흠날리는 벚꽃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벚꽃을 테마로 한 16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음 달 1, 2일 벚꽃 감성 버스킹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벚꽃 운동회가 열린다.

경포사거리부터 약 4.6km 구간에 감성 야간 조명이 설치돼 벚꽃과 어우러진 환상의 야경을

선사한다. 또 곳곳에 벚꽃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설치되고, 경포대 옆 공터에는 먹을거리 장터가 마련된다.

동해시는 다음 달 1, 2일 벚꽃이 만발한 부곡동 수원지 일원에서 '제18회 부곡동 유천문화축제'를 연다. 동해시는 해군 군악대 공연, 마술한마당, 음악회 등 벚꽃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조용동 부곡동장은 "4년 만에 여는 축제인 만큼 시 대표 벚꽃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준비했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달 8, 9일 속초시 상도문1마을 솔밭유원지에서는 '제11회 설악벚꽃축제'가 열린다. 주민들로 구성된 설악벚꽃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축제에서는 각종 체험부스와 공연이 진행된다. 춘천 남이섬에서는 다음 달 8~30일 '2023 벚(友)꽃 놀자'가 예정돼 있다.

삼척시 대표 봄 축제인 '삼척 맹방 유채꽃축제'는 다음 달 7일 개막해 23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이 축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근덕면 상팽방리 일대 6.8ha에 펼쳐진 유채꽃밭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벚꽃과 함께 장관을 이룬다. 매직풍선 만들기, 비눗방울 체험,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디제이박스, 라디오 공개방송 등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1일 (금)

지역 14면

삼척시, 도에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건설 협조 요청

정부 국도건설계획 반영 호소

삼척시가 도심을 관통하는 국도 7호선의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해 강원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상수 시장은 최근 도청에서 김진태 지사와 만나 현재 정부가 수요조사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6~2030) 계획'에 국도 7호선

삼척~동해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과 국지도 28호선(하장대전리~장전리) 2차로 개량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도 416호선(도계 신리~원덕월천리) 일부 구간 노선 변경 등을 비롯해 시관리 국도 38호선(삼척마평동~동해단봉동) 구간의 국가관리 지정국도 노선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정민

2023년 03월 31일 (금)

지역 20면

江原日報

태백 청정수소산업 전진기지로 도약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사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앞뒤
시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수소충전소 건립 추진

【태백】태백시가 청정수소산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태백지역에서 추진되는 강원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다고 30일 밝혔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사업 규제자유특구는 4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 상정돼 의결, 지정 고

시될 예정이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벌채, 산림 정비 과정 등에서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방치된 목재를 원료로 이용해 청정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규제 특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청정수소 추출을 실

증할 예정이다.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대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암동에 총 320억원을 들여 건립된 (주)그린사이언스파워 철암발전소와 연계한 사업도 추진한다. 철암발전소는 7,500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와 하루 수소차 100대 용량인 600kg의 수소 제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료는 저급석탄 및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다.

시는 특히 철암·장성·동점동 일대를 그린수소산업의 중

심축으로 삼아 SK에코플랜트 및 수소충전 제조업체 등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소충전소 건립도 추진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이 그린수소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모이는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며 “태백이 오투 산소도시에서 수소청정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좋은 청정연료를 생산해 깨끗한 도시이미지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광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1일 (금)

사회 05면

하루 5곳서 동시다발 산불·올해 첫 '2단계 대응' 발령도

화천 중리 야산 강풍에 진화 난항
헬기 17대 투입 62ha 피해 전망

양구·평창·강릉 주불 진화 완료
횡성 청일면 산불 주민 1명 대피
김 지사 도내 산불상황 긴급 점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대형 산불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화천 중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당국은 올해 첫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난항을 겪어 결국 일몰과 동시에 야간 진화체제에 돌입, 30일 하루에만 5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 첫 산불 대응 2단계 발령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0일 낮 12시 47분쯤 화천읍 중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오후 2시 5분을 기점으로 '산불 1



30일 낮 12시 47분쯤 화천읍 중리 배머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 화천군은 주택가 주민들에게 입산자제 및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계'를 발령하고 43분만에 다시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 소방 당국 등과 헬기 17대, 장비 30대, 진화대원 185명을 투입했다.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된 것은 올해 강원도내 처음이다.

'산불 대응 2단계'는 예상피해가 30~110ha, 평균 풍속이 초속 7m 이상, 예상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이 발령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산림당국은 현장의 화선은 4.3km, 피해 면적 62ha에 달할 것으로 추정, 50%의 진화율을 보였다. 당초 산림당국은 일몰전 주불 진화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때때로 바람이 초속 10m로 강해 확산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오후 7시 일몰과 동시에

야간진화체제에 돌입해 헬기를 철수시키고 진화대원 387명을 동원, 방화선을 구축했다. 민가 등으로 불이 번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일의 피해를 우려해 민가 주변은 살수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화천군은 인근 주민에게 산불 상황을 알리는 재난안전 문자를 보내고 인근 다섯 가구를 긴급 대피시켰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2단계 대응'이 발령된 화재 산발과 관련해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동시다발 화재

이밖에도 30일 강원도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이어졌다. 오후 4시 7분쯤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 등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33분쯤 주민 대피방송을 진행 주민 1명이 대피했다. 또 오후 3시 14분쯤 양구군 해

안면 이현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 1대와 화재진화차량 등 장비 16대, 인력 77명을 투입해 오후 4시 7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앞선 오후 2시 33분쯤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47분만에 꺼졌다. 화재당시 산림당국은 헬기 1대와 인력 75명을 투입, 오후 3시 20분쯤 불길을 잡았다. 화재 지점은 지난 29일 산불 발생 장소와 같은 곳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 59분쯤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산림당국은 헬기 2대를 포함해 장비 29대와 진화인력 290명을 투입해 낮 12시 50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정부지원위원회 일정을 마친 후 도청 소방상황실을 찾아 화천군 중리 및 도내 산불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진화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신재훈·김덕형·지역종합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1일 (금)
사설/칼럼 19면

수열에너지 산업 주도권 선점해야

-충북클러스터 조성 나서 기업 유치 경쟁 예고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대상부지 미계약 토지 소유주의 수용재결 신청이 잇따라 토지 보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클러스터가 춘천의 먹거리를 창출할 미래 산업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타지역 자치단체도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에서 유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관건은 춘천의 산업 주도권 확보 여부입니다. 사전에 치밀한 전략과 홍보전을 펼쳐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춘천시뿐 아니라 도와 정치권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81만㎡의 면적에 사업비 3040억원을 투입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양강댐심층냉수를 활용해 친환경 데이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을 조성, 지역의 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초까지 지지부진했던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최근 두달 동안 2,3차 미계약 토지 소유주의 수용재결 신청을 받은 결과 상당수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수용 재결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일련의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현재 45%대인 토지 보상 진행률은 최소 70%, 많게는 80%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오는 6~7월 첫 삽을 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를 사활을 걸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을 추진하면서 벌써 기업의 '더브콜'도 쇄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현장 견학도 조만간 이루어져 조성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충청북도 등 타지역과의 경쟁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열에너지 보급을 위해 대청댐과 충주댐을 통한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 충청북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 등을 내세워 관련 기업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3년 앞서 클러스터 조성을 마무리해 시기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31일 (금)

사설/칼럼 19면

음주운전 급증 더 경계할 때

-자치경찰 및 지자체 생활안전 범죄 억제해야

마스크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 데다가 4, 5월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아 음주운전자가 급증하는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춘천과 원주에서 심야 시간대를 전후해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에 해당하는 10건이 적발됐다는 뉴스가 본지에 실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인 음주 단속 결과이고, 특정 지역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례는 이보다 훨씬 빈번함을 예상하게 됩니다.

또한 4, 5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5월과 4월에 집중되는 계절 현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사고건수를 보면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2배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각별히 안전 수칙을 지키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주행속도를 지켜야 하며 음주운전도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무렵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은 개학과 개강 등으로 시내 유동 인구가 늘는데다가 5월엔 기념일과 공휴일이 잦아 야외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입

니다. 더욱이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 첫 봄철이기에 해방감을 누리 기 위한 심리적인 요인이 가세하면서 음주운전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농산촌에서는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때가 요즘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2020~2022년 농기계 관련 사고를 분석한 결과 748건 중 27%가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명 중 4명은 경운기 사고이고 트랙터, 예초기 등 각종 농기계 운행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 8명에 낙상과 추락사고, 끼이거나 깔리고 신체가 절단되는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합니다. 전도와 전복에 이르는 사고도 9%를 차지했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60, 70대 층에서 절반 이상 발생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등화장치 부착 및 장치 점검 등을 통해 사고 발생을 막는 행정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도 안전 부주의로 인한 경우와 함께 음주운전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통수단은 평소엔 편리를 주지만 음주운전을 하면 살인을 부르는 흉기가 됩니다.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죄 발생을 억제하도록 자치경찰과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는 때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31일 (금)

사설/칼럼 25면

道, 특별자치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응집력 키워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70여년간 국가 발전과 안보 및 환경 보존을 위해 희생한 강원도의 낙후성을 획기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출범 전에 법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다면 열악한 강원도의 도세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소수의 목소리로 전락하고 만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다. 출범 전에 강원도의 절박함을 드러내야 한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대체적인 애

기는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대부분 원론적인 내용이다. 물론 중앙 부처의 장차관들을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 초청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현안과 관련된 지역 실정과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 약속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더구나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더욱 그렇다. 역대 정부부터 추진돼 온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이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법률적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다. 절차와 과정을 두고 수십년간 감론을박했

지만 사실 그 근거에는 중앙정부 각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대한 미련, 중앙과 지방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등 관료적 갈등요인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권한 이양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중앙 부처의 입장과 특례를 통한 실질적 권한을 요구하는 지역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이번 회의를 주목하는 강원인들의 관심거리였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올 2월6일 발의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협의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 도 1호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대목에서 강원도는 더 치열하게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응집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나마 회의에서 이끌어 낸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 약속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여러 문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세밀한 사항뿐 아니라 심화된 정책이 토론평고 채택돼 기본틀을 다시 한번 보완·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안은 그대로 추진하되, 되풀이되는 정책은 새로운 정신적 긴장으로 참신하게 바뀌어야 한다.

한 총리 주재 지원위원회 회의 도청서 열려

권한 이양 부처와 논의 등 원론적 얘기 나와

실무 협의 통해 심화된 정책적 대안 만들 때

江原日報

2023년 03월 31일 (금)

사설/칼럼 25면

퇴임 조합장 특별공로금, 조합원들이 환영할 일인가

일부 조합이 퇴임 조합장에게 역대 '조합발전 특별공로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전국 농·축협에 '특별공로금 지급 자제' 공문을 발송할 정도다. 공문엔 "특별공로금은 규약에 따르면 지급이 불가하다", "특별공로금 부당 지급 등 규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특별공로금 지급이 '규약 위반행위'라는 의미다.

하지만 강원도 내 홍천의 한 조합도 최근 퇴임한 A 조합장에게 퇴임공로금과 추가 퇴직금으로 1억8,000만여원을 지급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규정 위반인 데다 조합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에서는 이사회와 총회 의결 사항에 따라 공로금을 준 것이며 이사회가 조합 발전 및 업적 등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추가 퇴직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법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특별공로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가가 어려운데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재벌 총수들이 퇴임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나쁜 행위다.

일부 조합장이 시대착오적 지배구조를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조합장뿐만 아니라 조합 이사나 대의원도 퇴직 때까지 최선을 다해 조합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특정인에게만 과도하게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이런 거액을 지급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 더구나 조합원들이 한두 푼씩 출자를 해서 만든 게 조합이다. 그만큼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조직에서 특정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상임 조합장에게 추가 보수까지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질 만하다. 조합 이사회는 도대체 뭘 하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따지고 개선 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특별공로금은 어떤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은, 조합 자의적 결정에 따른 지급이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조합·조합원에게 경제적 해악을 끼치는 행태로 여겨졌다. 반복되는 논란에도 특별공로금 문화는 쉬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두면 특별공로금이란 게 당연시돼 조합장 임기가 끝날 때마다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조합의 특별공로금 지급 문제가 지역 농협의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과 잘 맞은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